

재산·자동차세 납기 분리

행자부, 중복따른 국민부담 해소 검토

재산·종토세 과세기준일도 통일키로

지방세 납기와 과세 기준일이 조정된다. 납기 중복으로 인한 불편과 과세기준일이 달라 빚어온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8일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중복돼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과세 기준일이 다른 일부 세목의 기준일도 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6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중복돼 있다. 지난해에는 전북도와 지방세정협의회에서 과세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행자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달라 납세자의 혼란 및 업무 연계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재 재산세는 5월 1일, 종합토지세는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동일한 부동산을 놓고도 기준기준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세 납기는 학자금과 농어자금등 다른 자금 필요시기와의 중복을 피해 국민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쪽으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세기준일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기준일도 5월1일로 통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기준일 통일안은 지난해 민주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정부에 건의했었다.

행자부 권강웅(權康雄)세제심의관은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세목의 납기조정과 과세기준일을 통일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 지방세 징수규모는 23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매일, 2001. 2. 19(월)]

부도기업 체납세 받아냈어요

서울 중구 억순이 남현종 씨

서울 중구청에선 포기상태였던 7억9,000여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세무과 한 여 직원의 활약상이 화제다.

세무1과 체납징수 담당인 남현종 씨(44·여·세무7급). 남씨는 87년부터 지방세를 내지 않다 97년 부도난 덕수건설 앞으로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려 하자 갖은 노력 끝에 여러 채권기관중 우선순위로 체납세금 7억9,800만원을 받아냈다. 지난해 중구 체납세금중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거액이다.

체납세금을 받아내기까지 남씨가 보인 끈기와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다.

택지개발사업으로 나오는 토지보상금이 청산된 덕수건설에게 지급된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는 도시개발공사에 채권압류통지서를 접수시켰다.

하지만 은행과 세무서 등 선순위 채권자가 이미 있었다.

그러나 남씨는 하루종일 재판기록을 뒤진 끝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패소,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들은 빚을 받을 수 없게 되자 98년 덕수건설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소송을 제기했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다. 선순위 채권자들의 덕수건설에 대한 압류는 그대로 남아있어서다. 불확실 공탁으로 소송을 해야만 보상금을 찾아갈 수 있어 우선 압류 해제를 해야만 했다.

그런데 71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제일은행측 누구도 압류 말소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남씨는 은행장실 앞에 아예 누워 버렸고 가까스로 압류말소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26일 공탁일에는 ‘시간과 피말리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도시개발공사 보상팀장과 함께 법원 공탁과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류미비로 다시 구청에 와야 했다. 이후 택시 기사에게 눈물로 호소해 비상등을 켜고 달려 오후 4시30분이 넘어서야 법원

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4시55분에 드디어 보상금이 입금됐다. 남씨는 다음날 출근하면서 세무과 전직원들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박수세례를 받으며 쌓였던 긴장과 피로를 풀 수 있었다.

79년 공무원이 돼 21년간 세무업무를 맡아온 남씨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포기한 채 뛰어다녔다”며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겸손해 했다.

[대한매일, 2001. 1. 19(금)]

공과금 납부 인터넷으로 고지

오는 7월부터 지방세 납부와 같은 고지 및 통지업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우편물 대신 인터넷 고지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1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문서로 민원신청 및 고지·통지 등을 할 수 있는 세부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를 인터넷 e메일로 고지하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우편발송을 병행해왔다.

[대한매일, 2001. 3. 2(금)]

고지서 우편물 홍수 이제 그만

인터넷업체 개발 전자고지서 행정기관 앞다퉈 도입 인기

‘각종 세금고지서를 인터넷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맞춰 ‘전자고지서 발송시스템’이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문서로 발송할 때보다 수수료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다. 공·사문서를 한꺼번에 발송, 행정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됐는지 입증할 수 있고 보안도 잘된다. 곧 입법이 예상되는 ‘전자정부

구현 법률’에도 전자고지서의 송달입증을 명문화하고 있어 이같은 시스템 도입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전자고지서 발송시스템의 대표주자는 인터넷 업체인 (주)아마스코리아. 이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이미 22개 기초단체가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운용방법은 우편번호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 회사가 개발한 ‘Family ID’가 자동식별해 가정에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식이다. 가정에서는 이를 확인한 뒤 주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5월 이후 서울 강남구·송파구 등에서 이 시스템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연(李明然) 아마스코리아 사장은 “이 시스템을 올해는 시단위, 내년에는 군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통신료·의료보험료·국민연금·수업료·신용카드 사용료 등에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회사 홈페이지 주소(www.amasmail.com)나 전화(02)523-2985.

[대한매일, 2001. 2. 23(금)]

세금고지서 이메일로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高在得)는 다음달 2일부터 각종 세금정보나 지방세 관련 자료를 주민의 이메일로 전송해주시기로 했다.

또 기존 인터넷 세무민원실을 개편한 ‘온라인 무료상담 코너’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세금고지서나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보고자 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www.sungdong.seoul.kr)에 접속해 ‘성동구웹메일’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세무민원도우미’를 클릭한 뒤 ‘지방세 상담코너’에 들어가면 온라인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대한매일, 2001. 2. 28(수)]

소비세 징수액 작년 첫 감소

경기침체로 소비둔화

지난해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둔화해 소비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특별소비·주세 등 3개 소비세 징수액은 12조 5,939억원으로 1999년의 12조 6,617억원에 비해 0.5% 줄어들면서 사상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세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대우자동차 최종부도와 반도체가격 하락, 국제유가 불안정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유 소비량은 전년 1,788만 2,981kl에서 1,828만 5,120kl로 증가한 반면 휘발유 소비량이 1,000만 652kl에서 970만 671kl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교통세액은 8조 3,8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7% 줄었다. 그러나 경유와 LPG, 승용차, 공기조절기 등에 부과된 특별 소비세액은 99년의 1조 8,521억원에 비해 11.5% 증가한 2조 649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일보, 2001. 3. 6(화)]

토지정보 안방서 ‘클릭’

서울 강남구 첫 인터넷 서비스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세요.’

서울 강남구(구청장 權文勇)는 29일 토지·건축물 대장과 개별공시지가 등 모든 토지 관련 종합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kangnam.seoul.kr)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됐다. 토지 관련 각종 증명은 지하철역, 은행 등 관내 62곳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

이 정보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토지종합정보’를 클릭하면 된다.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토지의 지목·면적·등급, 건축물의 면적·구조·층별용도·필지별 도시계획사항, 지적도면·건축물 배치도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62곳에 설치돼 있는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를 상반기중 41곳에 더 설치할 계획이다.

[대한매일 2001. 1. 30(화)]

광진구 공시지가 백서 발간

지가동향·변동내역등 소개

서울 광진구는 1일 전국 최초로 공시지가(公示地價)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개별공시지가 백서’를 발간했다.

지난 90년 도입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

백서에는 관내 동별 지가동향을 비롯해 연도별 지가변동 현황, 최고·최저 지가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또 공시지가의 도입 배경에서부터 지가조사 및 산정체계의 변천내용, 공시지가의 효력 및 적용범위, 조사체계, 조사 및 산정방법 등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토지특성 조사, 지가산정, 결정공시 및 이의 신청 등 광진구 개별공시지가 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 정리돼 있다.

광진구 관계자는 “이번 백서 발간 외에도 지난해부터 공시지가 결정 전에 주민들이 지가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사전 열람제도를 시행하는 등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매일, 2001. 3. 2(금)]